

연구자료 D186 / 2004. 3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안 종 운 전 농림부 차관
구 기 보 전 문 연 구 원

머 리 말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한·중 양국 간 교역은 1992년 중국과 국교 수립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 무역을 비롯한 농업 교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은 일반 교역과 달리 한국이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간 교역 이 밖에도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서 한·중 농산물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전후 농업구조조정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왔으며, 농산물 수출을 더욱 증가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쌀을 전략적 수출 품목으로 선정하고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수입에 힘입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 농산물이 계속해서 밀려들 경우 한국은 농업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 식량산업이자 국가안보에 중요한 쌀산업이 중국의 쌀 수입으로 인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중국산 저가 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업 및 농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농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농업으로 인한 양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농업 협력을 통해 양국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장기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 부문의 과제”의 1차 연도인 2003년도 기본연구 과제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에서 실시한 안종운 전 농림부 차관의 중국 현지 출장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정부의 공식 입장보다 담당 분야의 고위층 관료들의 견해가 더욱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자료의 정리와 보완에 힘써 준 구기보 박사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준 정정길 박사의 노고에 감사한다.

2004.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이 자료집은 2003년도 기본연구 과제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에서 실시한 중국 현지 출장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간 교역은 1992년 중국과 국교 수립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농산물 교역은 한국이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WTO 가입 전후 농업 구조조정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왔으며, 농산물의 수출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농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농업으로 인한 양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농업 협력을 통해 양국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식 입장보다 담당 분야의 고위층 관료들의 견해가 더욱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차 례

제1장 중국 WTO 가입의 의미: “기회와 도전”	1
제2장 WTO 가입 전후 중국 농업의 구조조정: 농업의 산업화 중심	
1. 농업개혁정책의 성과	3
2. 농업발전전략: 농업의 산업화	12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5
제3장 WTO 가입 후 한·중 농업관계	
1. 중국의 한국 농업에 대한 기본입장: 개도국 지위 인정 인색	16
2. 중국의 “쌀” 수출 정책 변화	18
제4장 중국의 FTA 전개 과정 및 전망	
1. 중국·아세안 FTA	23
2. 중국·홍콩간 CEPA 협정	25
3. 한·중·일 FTA	27
4. 소결: 중국·아세안 FTA에 전력투구, 한·중·일 FTA는 초기단계	29
부 록	30
참고문헌	37

제 1 장

중국 WTO 가입의 의미: 기회와 도전

이번 중국 방문은 매우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응노력을 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중국을 방문하고도 극히 일부 지역만을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해서 이번 여행은 가급적 많은 지역을 가보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20일간의 길지 않은 여행이었으나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본다. 우선 베이징에서의 8일간은 농업부, 농업대학, 인민대학, 농업경제연구소, 사회과학원 등 농업 관련 기관과 학자들을 만나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다음 일정으로는 운남성, 절강성, 강소성 등 농업지대를 돌아보고, 농민 그리고 일선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등과의 대화를 나누었으며, 현장을 볼 수 있었다. 비교적 광범위한 접촉이었다.

중국의 많은 농업 관련 학자나 관계자 그리고 지방 관료들은 WTO 가입이 “중국의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도전” 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리더집단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서부산악지대의 소규모 농가의 농민들 생각은 아직 모르지만, 중국인들이 WTO 가입을 기회라고 생각한 점은 첫째, 중국의 농업이 가격과 품질을 향상시킬 부문이 충분히 남아 있고 비록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중국의 농산물을 더욱 많이 수출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비록 WTO 가입기간이

짧기는 하나 2002년 한 해 동안 농업 부문 무역흑자가 57억불에 달한 점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셋째, 중국 농산물의 최대 취약점이었던 안전성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 변화와 이에 대한 자신감을 들고 있다. 농약잔류문제가 큰 문제였으나 농산물의 영양, 농약, 중금속 검사제도의 철저한 이행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농산물이 일본이나 EU시장에서 클레임이 걸리지 않고 수출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반면 WTO 가입이 중국 농업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은 첫째 곡물류 등 토지 집약적인 농산물의 경우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농산물을 중심으로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라는 점을 꼽고 있다. 둘째는 이로 인해 농가소득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셋째, 서부산악지대 농업과 동부평야지대 농업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 등을 염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상과 같이 WTO 가입자체를 “기회와 도전”이라는 양면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수출주도의 농업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기회 활용”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전력투구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제 2 장

WTO 가입 전후 중국 농업의 구조조정: 농업의 산업화 중심

1. 농업개혁정책의 성과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10여 년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중국은 이 기간 중에 중국 농업에 대한 발전 전략을 착실히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WTO 가입 1여 년 만에 동요 없이 정해진 발전 전략대로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이후 5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것은

- ① 인민공사해체와 책임생산제의 완료,
- ② 농산물유통에서의 시장기능도입성공,
- ③ 소유제에 있어서 사유, 공유(국유, 집체)의 공동발전으로 안정적 제도의 정착
- ④ 농촌 등 지방기업화를 이룩한 향진기업의 발전,
- ⑤ 국가지원과 보호, 조절 시스템의 구축 등 5가지 분야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이 추진되면서 꾸준히 발전, 정착되어 온 제도가 이제 그 결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1.1. 인민공사의 해체와 책임생산제 완료

개혁 이전 중국 농촌의 모든 부문을 통괄하던 인민공사 체제는 대약진운동

이 실패로 끝나면서 1960년대 이후에는 ‘인민공사 - 생산대대 - 생산대’의 3급소유제 구조를 유지하였다. 이 구조하에서 약 30가구로 구성된 생산대는 농업 생산에서 생산, 회계, 분배의 기본단위가 되는 집단농장의 역할을 하였다. 반면 비농업 분야의 생산은 대부분 人民公社나 生産大隊가 관리하는 기업이 담당하였는데, 이들을 社隊기업이라 한다.

그러나 1978년 이후 농촌조직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중국은 농업 부문에서 시작하여 1983년 말까지 거의 전 지역의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개별 농가가 생산의 주체인 동시에 잔여이익청구자가 되는 가족농 체제인 소위 농가생산경영청부제를 시행하였다. 1983-84년 인민공사 체제가 해체되어 인민공사는 대체로 지방행정 단위로서의 鄉으로 대체되고, 생산대대는 村으로 이어진다.

1.2. 농산물 유통의 시장기능 도입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제는 다음과 같은 개혁을 거쳐 발전하여 왔다.

1.2.1. 농산물 유통시장 개혁초기: 1978~1984년

1979년부터 중국은 농산품 ‘일괄수매 할당수매’제도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였다. 첫째, 농산품 수매가격 인상. 1979년 3월부터 중국은 식량, 유지유료, 면화, 생돼지 등 18종의 주요 농산품 수매가격을 평균 24.8% 인상하였다. 1982년 농산품수매가는 1978년에 비해 41.6% 제고되었다. 그러나 농산품 수매가격 인상 후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 (1) 정부는 수매가격 인상 후 판매가격이 일정 기간 변하지 않아 발생한 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 부문에 재정보조금을 주었다.
- (2) 정부는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가금, 계란, 채소 등 8종 주요 부식품 판매가격을 인상한 후 도시직공 생활비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공에게 부식품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3) 정부는 8종 부식품 가격인상 후 상품의 경영손실을 초래한 경우 국가재정으로 보조하였다.

둘째, 농산품 일괄수매 할당수매의 범위 축소 및 시장조절의 비중 확대. 중

공중앙은 1983년 “농촌경제정책의 몇 가지 당면 과제(當前農村經濟政策的若干問題)”를 발표하였다.

- (1) 농산품에 대해 1978년 이전의 자류(自留) 이외에 전부 할당수매하던 것을 1979년 60% 할당수매로 바꾸었다.
- (2) 국민생계와 관련된 소수 중요 농산품에 대해서는 계속 일괄수매 할당수매를 실행하는 것 이외에 기타농산품에 대해서는 일괄수매 할당수매를 시행하지 않는다.
- (3) 농민은 일괄수매 후의 산품(식량 포함, 면화 제외)과 비일괄수매 할당수매 산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루트의 경영을 할 수 있다.
- (4) 국영상업은 적극 협상구매 및 판매업무를 전개하여 시장조절에 참여한다.
- (5) 공급판매사와 농촌의 기타 합작상업조직은 융통성 있게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다.
- (6) 농민개인도 도시에 들어가거나 현(縣) 및 성(省)을 나갈 수 있다.
- (7) 농부산품 외부운반을 귀속단위가 심사, 비준하는 규정을 철회한다.
- (8) 일부 인기산품에 대해 일괄수매 할당수매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전액수매를 하지 않는다.
- (9) 수매 기준량을 확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기준량을 정해야 한다. 국가의 계획가격 일괄수매 및 할당수매 비중은 1978년 84.7%에서 1984년 39.4%로 낮아졌다. 국영상업과 공급판매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경영하는 농산품의 시장점유율도 1978년 82%에서 1984년 73%로 하락하였다. 또한 농산품수매 중 계획관리 품종은 주로 식량, 식용유, 면화, 면벨벳, 생돼지, 차, 황마, 면양모, 우피 등 9종 품종이다.

1.2.2. 농산품 일괄수매 일괄판매제도 폐지 및 농산품시장 조절 메커니즘 수립: 1985~1992년

1985년 1월 “농촌경제 진일보 활성화에 관한 10대 정책(關於進一步活躍農村經濟的十項政策)”은 농산품유통제도개혁과 신체제 시범운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요 특징은 국가가 더 이상 농민에게 농산품 일괄수매, 할당수매를 강요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각각 계약수매와 시장수매를 한다는 것이다.

식량 일괄수매의 계약수매 전환. 상업 부문은 파종계절에 농민과 협상하여 수매계약을 한다. 국가는 수매계약을 한 식량가격을 “역삼칠(逆三七)” 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계산한다(즉 30%는 원래의 일괄수매가격에 따라 70%는 초과수매가격에 따라 계산함). 수매예정 식량 외에는 농민이 자유로이 시장에 판매하며, 시장식량가격이 원래의 일괄수매가격보다 낮은 경우 국가가 원래의 일괄수매가격에 따라 수매하여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농산품시장 조절메커니즘 수립. 1985~1992년 농산품유통제도 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산품가격의 형성 및 관리 메커니즘을 점차 전환한다. 국가는 일부 주요산품(가령 면화)에 대해서는 가격을 직접 정하고 일부품종(가령 식량, 식용유, 돼지 등)에 대해서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한다. 그 외 절대다수 품종의 수매 및 판매가격은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절하게 하였다.

1.2.3. 농산품유통체제의 개혁과 완성: 1992년 이후

이 시기 중국은 농촌시장경제 수립 방법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농산품에 대해 시장수매 및 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계약수매를 보충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간접조절 수단을 운영하였다. (1) 정부는 식량저장제도를 수립하였다. (2) 각급 정부는 식량위험기금제도를 건립하였다. (3) 정부는 농산품국제무역을 통해 일부식량을 수입하고 국내농산품유통을 조절하였다.

둘째, 농산품 가격 형성메커니즘을 진일보 개선한다. 정부는 품질가격차, 품종가격차를 통해 등급가격차, 계절가격차, 지역가격차를 안배한다. 최저보호가 수매제도를 구축하고 최고한도가 판매를 실행한다. 건전한 저장조절제도를 구축하고 상품 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한다.

셋째, 1999년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가 지방 식량위험기금을 보조한다는 전제하에 지방정부가 청부하는 방법을 실행하기로 했으며, 국가의 재정보조금이 주로 보호가구매제도와 저장조절제도 건립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소비자보조금의 경우 복지성 전민보조금은 구제성 목표보조금으로 전환하였다.

넷째, 현재 중국농산품유통제도는 여전히 개혁하고 정비하는 단계이다. 그 내용은 주로 식량위험기금 및 저축조절제도를 완비하며 식량재정보조금을 직

접 농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¹

1.3. 사유, 공유(국유, 집체)의 소유제 정착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속성장을 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은 국유기업보다 다양한 형태의 비국유기업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비국유기업이 발전하면서 중국의 소유제는 과거의 전통적 국유와 집체에서 벗어나 사적 소유, 혼합소유 등 다양한 소유제를 갖게 되었다. 중국의 기업도 국유기업, 집체기업 등 공유제 기업 이외에, 사영기업, 개체기업, 외자기업(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 등), 주식제 기업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한편 다양한 소유제 기업은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 이외에 과거 공유제체제하에서의 모순을 해결하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가령 다양한 소유제의 발전은 국유기업이 안고 있는 과중한 사회보장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비국유기업 특히 민영기업은 국유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대출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 법률정비나 제도적 개선 등으로 인해 민영기업은 과거에 비해 유리한 상황에 있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1.4. 향진기업의 발전

향진기업은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수의 동업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다양한 종류의 비국유기업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향진기업의 농촌 지역의 비농업 부문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1.4.1. 향진기업의 성장추이

가. 개혁 초기: 1979-83년

이 시기는 인민공사가 공식적으로 해체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향진기업은 아직 사대기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었다. 이 시기는 농촌개혁의 시작과 더불어

¹ “중국 농업개혁의 과정, 성과, 문제 및 시사점,” 『북한의 농업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워크숍 자료집, 2003.

어 향진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이 준비되고 있던 단계이며, 아직 향진기업의 비약적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 경제조정정책의 영향으로 향진기업의 수는 약간 줄었지만 생산액은 연평균 실질성장률 12.5%를 기록하였다.

나. 비약적 성장시기: 1984-88년

1984년 정부는 “사대기업의 신국면을 개척하는 것에 관한 보고”를 발표하였다. “보고”에서는

- ① 사대기업의 명칭을 향진기업으로 개정하고,
- ② 향진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종래 사대기업 이외에 사적 소유인 연호기업(聯戶企業)과 개체기업까지 향진기업 속에 포함시키고,
- ③ 향진기업의 경영범위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향진기업을 국영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시기 향진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기업수 69.6%, 종업원 수 24.2%, 실질생산액 33.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다. 조정과 정돈 시기: 1989-91년

이 시기 전반적인 시장수요 위축과 향진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은행대출의 제한, 조시징수의 강화 등)로 향진기업의 성장이 크게 위축되었다. 기업수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 0.2%와 0.4%로 거의 현상 유지 수준에 그침, 반면 총생산액은 연평균 21.4%의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유지하였다.

라. 제2차 비약시기: 1992-94년

정부는 1993년 “서부지역 향진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관한 결정”을 반포하고 산업정책과 신용정책(매년 50억 위안으로 특별지원 자금 신설) 면에서 각종 지원, 우대 조치를 취함으로써 낙후된 서부지역 향진기업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향진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기업수 9.3%, 종업원 수 7.7%, 총생산액 54.2%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마. 안정적 발전시기: 1995년 이후

1995년 정부는 지나친 경기과열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 긴축

적인 재정, 금융정책을 취함. 1997~98년에는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 이 속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향진기업의 합병과 파산이 발생하여 기업수가 크게 줄어들고 종업원 수도 별로 증가하지 않음. 그러나 대형 향진기업은 오히려 크게 성장하였다. 1997년 “향진기업법”이 공포되어 향진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적 보장이 이루어 졌다.

1.4.2 향진기업의 성장요인

가. 외적 요인

향진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제 여건의 변화에 힘입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농업 생산제도의 개혁이다. 1979-83년 ‘농가생산경영청부제’의 실시로 농민의 생산의욕이 제고되었다. 정부의 농산물 구매가격의 대폭적인 인상도 농업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다. 1979-84년 농산물의 정부 구매가격은 품목에 따라 25~40% 인상되었으며, 농업 생산량은 34~190% 증대되었다. 한편 농민은 구매가격인상과 생산량 증대로 인해 저축을 증가하였으며, 이 저축은 향진기업의 중요한 자금원이 되었다.

둘째, 방대한 잉여노동력이다. 농업 생산제도의 개혁으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방대한 잉여노동력이 드러나게 되었다. 대도시로의 노동력 이동은 호적제도에 의해 제한되어 있어 잉여노동력은 현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업압력하에 지방정부는 향진기업은 적극 육성하였다. 한편 향진기업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중앙과 지방정부의 향진기업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는 향진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였다. 특히 1984년 “사대기업의 신국면을 개척하는 것에 관한 보고”를 통해 향진기업 경영범위 제한을 철폐하고 국영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지방정부는 특히 향진정부의 향진기업 육성 정책이 향진기업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향진정부는 기업 설립의 결정에서부터 자금의 조달, 공장용지의 제공, 생산설비의 도입, 기업경영자와 기술자의 초빙, 원자재 입수와 제품 판로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넷째, 경제개혁에 의한 시장 체계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재시장, 생산재시장, 자금시장, 노동력시장 등 이외에 기술시장, 정보시장, 부동산 시장 등에 이르기까지 시장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시장 체계의 형성은 향진기업들이 생산설비와 원료, 자금 조달, 제품판매 등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다섯째, 은행 및 신용협작사의 대출 증대를 들 수 있다. 향진기업에 대한 은행과 신용협작사의 급속한 대출증대는 향진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78~92년 은행과 신용협작사의 향진기업 대출액은 연평균 38% 증가하였다.

나. 내적 요인

향진기업은 위의 외적 성장 요인 이외에 자체적인 성장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신규투자와 생산품목의 결정에 유리하였다. 향진기업은 신규투자나 생산품목 변경시 다단계에 걸쳐 상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영기업과 달리 비교적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렸다. 향진기업은 제품의 수요 전망이 좋고 높은 이윤이 기대되면 향촌정부나 은행, 신용협작사의 지원을 받아 과감한 투자를 한다.

둘째, 원자재 구입과 제품 판매에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향진기업은 경기침체시 제품의 적체 현상이 나타나면 적시에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거나 새로운 판매루트를 개척하였다. 특히 원자재 조달과 제품판매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셋째, 공장장 및 관리자 임명에도 경영 능력이 우선시 되었다. 기업경영자는 정치적 서열이 아닌 기업경영능력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임기 중 경영실적에 따라 재임 여부가 결정되었다. 일반관리자의 임명은 다양한 관리업무 경력과 생산기술 숙련도를 중요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었다.

넷째, 임금지급 방식도 국영기업에 비해 보다 철저한 성과급이 적용되었다 (유희문 등 2000, 180-213).

1.5. 국가지원과 보호, 조절 시스템의 구축

중국 정부는 WTO 가입 전후 국내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맥을 예로 들어 보자. 정부는 WTO 가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입장벽의 철폐를 약속한바 있다. 관세의 경우 쿼터 내 관세율은 1%, 쿼터외 관세율은 2002년 71%, 2004년 65%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소맥에 대한 관세율쿼터의 90%를 국유기업에, 나머지 10%를 비국유기업에 할당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지도가격을 통해 낮은 관세율로 수입되는 90%의 소맥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통제를 할 수 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쿼터 내 수입은 정부지도가격으로 방어하고 쿼터 외 수입은 고관세율로 대응한다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주용기 전총리는 농가 수입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한바 있다.

- (1) 농지를 산림으로 복귀시킨다. 중부와 서부지역의 경우 농지의 산림화는 생태계 복원에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생산구조의 다양화와 특성화 차원에서도 적합할 것이다.
- (2) 농촌지역의 조세제도, 행정 권한, 곡물과 면화의 분배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조세 및 행정개혁의 경우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 마련과 농가부담 감소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곡물과 면화의 경우 시장 중심의 생산과 판매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3) 농가 수입원을 다양화한다. 농촌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 개발을 도모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농촌기업의 도시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농가 수입 증대를 꾀한다. 또한 지방정부도 농촌기업의 도시진입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서비스를 제고한다.
- (4) WTO 가입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농업 분야와 농촌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생산 증대뿐만 아니라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2. 농업발전전략: 농업의 산업화

중국의 농업발전전략은 경제작물 중심의 수출산업화 전략에 있는 것 같다. 이미 중국이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토지 집약적 곡물류는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고, 축목업, 과채류, 양잠 등 경제적 우위에 있는 농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소비 기반을 확대하면서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짚게 받았다.

2.1. 농업 산업화의 주요 내용

그 중요정책 포인트는 농업의 산업화다. 이는 공장화된 농업과학기술원구를 만들어 이들 농업원구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전담시키고 있는 특이한 제도이다.

즉, 농산물 가공업을 전담하는 기업(용두기업)을 만들어 육성하고 이 기업체를 중심으로 농민들은 원료생산에 전념하고 그 생산물을 가공, 유통, 수출하는 책임은 기업체가 전담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결성되어있지 않는 중국의 현실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었나 싶다. 이러한 농업원구가 시급 이상이 지역을 대상으로 2000여 개 국가급 기업이 30여 개가 있다고 한다.

2.2. 농업 산업화의 사례

실제로 2~3개의 농업원구를 방문하였다. 과일통조림기업인 오주성(五州星) 기업은 약 80,000평의 거대한 공장규모를 가지고, 오렌지, 복숭아, 사과, 배 등 여러 종류의 통조림 등 가공을 하고 있었다. 이 기업은 과일생산 농가와의 사적 계약에 의해 “협약재배”를 하고 있으며 이 기업과 협약을 맺은 농가는 이 기업이 제시하고 있는 재배방식, 예를 들면 농약의 종류, 농약 뿌리는 횟수, 비료 주는 방식, 품질, 규격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즉시 협약이 파기되며, 그 농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업은 생산된 과일 통조림 등을 EU와 일본 등에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 품질 등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규제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이

윤, 나아가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나 협동조합이 검사하고 규제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고 철저하다.

채소가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해통(海通)기업을 방문했다. 270여 종의 각종채소류를 냉동, 가공, 진공 포장하여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공장규모는 오주성기업과 비슷한 대규모공장이었다. 여기서도 농민들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기업이 제시한 방식대로 농사를 짓고 규격과 품질에 맞는 채소류를 생산할 것을 계약하고 있다.

농민 한 사람이 약 8,000~10,000평 정도를 책임지고 생산하고 있으며 영농일지를 철저히 기록하여 뿌린 농약의 종류와 횟수, 일자 등을 기재하여 기업체 직원의 확인을 받고 있었으며 이 농장일지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첨부되어 있다. 과일 통조림 가공과 마찬가지로 기업체 중심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체 사장들은 EU나 일본 등 자사제품판매시장을 연 10회 이상 방문하여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와 욕구를 수집하여 자사 제품개발에 반영하고 있었고 기업체마다 상품개발 연구소를 운영하여 품질향상과 안전성, 신제품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2.3. 농업 산업화의 장점

이러한 중국의 농업의 산업화 정책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첫째, 소규모 농가의 농업 생산을 상업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매우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최종상품이 세계 시장을 겨냥해야 하기 때문에 원료 농산물의 생산이 상업적 생산이 되지 않고는 이 체제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마인드가 시장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중국의 농산물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보다 광범위하게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셋째,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체제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써 현대적 생산 방식을 급속히 확산 시키고 있다. 최종생산품이 EU나 일본 등 까다로운 시장을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판로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가 가능하다. 기업체가 자기상품을 고품질화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의해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질을 매우 까다롭게 관리함으로써 급격한 품질 고급화가 가능하게 된다.

다섯째, 이러한 선도농장의 선례에 따라 다른 일반 농가의 품질과 안전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전체 농산물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고급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한 고품질 상품개발과 해외시장개척으로 중국 농산물의 판로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감으로써 농가소득원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장점을 잘 살려나간다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의 중국 농업은 매우 위협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방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2.4. 농업 산업화의 정책 전망

중국은 농업의 산업화라는 기치 아래 매우 역동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개방화에 대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농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인다.

이들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4개 측면에서의 정책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즉,

- ① 농민세금과 비용 절감을 위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특산세를 폐지하고 정부기구의 인원을 절감하여 농민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 ② 알곡유통체제를 개혁하여 보다 시장화 방식으로 개편하고 시장조절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고
- ③ 토지임대제도를 보다 완벽화하여 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78년부터 시행해 온 토지 임대기간 15년을 30년으로 늘려 주고 이 농자의 농지활용방안과 농지전용을 엄격히 하여 농지감소를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 ④ 농촌금융 부문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372개의 국가 급 용두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자원을 원활히 하여 농산물 가공기업체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 등이다.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앞으로 중국 농업과 농촌이 소득격차, 지역 간 격차 등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중국 정부나 국가가 풀어야 할 내부문제이지 우리 농업과 직결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농업이 대외적으로 미칠 영향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여 대응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도 농정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인다. 여기에 농민, 정부, 학계, 정치계가 합의해야 진정한 한국 농업 살리기가 나오지 않을까?

제 3 장

WTO 가입 후 한·중 농업관계

1. 중국의 한국 농업에 대한 기본입장: 개도국 지위 인정
인색

1.1. WTO 회원국으로서 중국의 기본입장

중국은 WTO 가입시 관세율을 40%에서 15%로 감소하여 선진국의 관세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무역 환경이 공평한 환경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자율화수준이 높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시장이 더욱 더 개방되어 공평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의 개방속도가 미국과 중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의 목표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고 있다.²

또한 중국은 앞으로 DDA협상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입장을 수립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WTO 체제의 후발주자로서 먼저 가입하여 체제를 갖추고 있는 선발주자들이 후발주자인 중국 등을 더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² 중국은 한국에 대한 농산물 무역흑자가 50억 달러이지만 전체적으로 13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외무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1.2. 중국의 한국 농업 · 농촌에 대한 인식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인 측면을 내보이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한국경제가 중국경제보다 발전되어 있고 한국은 농촌과 농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중국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의 농촌은 한국농촌의 60~70년대의 수준임을 강조하고 한국의 농업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농업, 농촌과 비교해서 볼 때 그래도 한국 농민의 소득수준은 개도국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³ 중국학자들은 한국의 농민들이 중국 서부산악지대 농민들의 삶과 소득수준을 보면 이해가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한 입장에 상당히 냉소적인 분위기이다.

1.3. 한국의 협상전략

이러한 중국 내부 농업계의 입장은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의 목표가 한국과 일본인 점과 맥이 통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중국 내의 여러 계층 설득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 농업부는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학계, 연구계 등에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의 협상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DD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협상에 노력해야겠지만, 중국의 농업계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여러 계층을 망라한 대표단 등을 구성하여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을 집중적으로 이해, 설득시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³ 중국은 한국 농업 부문이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으나 타 산업은 개도국 중 가장 앞서 있다고 본다. 한국 농업환경은 중국보다 매우 좋으며 특히 농기구 등 측면에서 매우 앞서 있다고 보고 있다.

2. 중국의 “쌀” 수출 정책 변화

2.1. 중국의 쌀 수출정책

2.1.1. 중국 쌀 생산정책

중국은 주로 경제작물(과채류, 축산, 양잠 등)을 수출하고 곡물류를 수입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곡물류 중 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WTO 가입 후 쌀 수출경쟁력의 저하를 막고 수출을 증가하기 위해 쌀 생산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한편 중국은 쌀 수출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를 100kg(벼 140kg)으로 계산해 보면, 연평균 쌀 소비량 증가는 약 110만 톤 정도(벼 157만 톤)가 된다.

중국은 증가하는 국내 쌀 소비수요와 WTO 가입 후 새로운 환경을 고려하여 쌀 생산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있다. 국내외 두 시장에 안정적인 면적을 기초로 고효율을 중심으로 품질을 제고하며 원가를 절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본내용으로 산업화경영을 하며, 우수 품질의 무공해 쌀 생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중국 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중국의 WTO 체제 하의 쌀 생산정책은 다음과 같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벼 재배면적을 안정시키고 비용 절감 및 고효율 기술을 보급시켜야 한다. 남부 벼 생산지는 적당한 생산면적을 회복시켜 전국 벼 기본 생산면적의 감소를 막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생산원가를 낮추고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고 논 경작제도의 개혁을 통해 논의 효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에 적합한 농작물을 개발하고 농업 효율성을 제고하며 농작물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쌀의 품질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해 우선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여 우수 품종을 육성하고 우수 재배기술을 연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수 품종과 그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산업화를 통해 우수 품질의 벼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그 외에 쌀 가공기술 개선 및 쌀 가공기업 개조를 더욱 가속화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쌀을 공급해야 한다.

셋째, 현재 낙후된 쌀 생산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벼 생산기지 건설과 벼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중국 쌀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 등 국가에 수출하기 위한 양질의 무공해 중단립종 쌀 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도기업 지원, 우수 쌀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우수 쌀의 산업화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2.1.2. 중국 쌀 수출정책

최근 수년간 중국 쌀 수출은 과도하게 소수국가에만 의존하고 있다. 1998년 중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쌀 수출은 136.3만 톤으로 당해 연도 수출량의 36.4%나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중국산 쌀 수입이 62.9만 톤이 감소한 73.4만 톤에 불과했다. 이는 1999년 수출량 감소의 60.5%에 해당한다. 2001년 11월에 이르러 인도네시아의 중국산 쌀 수입량은 만 톤 이하로 떨어져 2000년 대비 54.2만 톤이 감소하였다. 이는 2001년 중국 쌀 수출량 하락의 40%에 해당된다. 개별 수입국의 수입량 하락이 중국 쌀 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행 쌀 수출구조를 보면 중국의 쌀 수출은 여전히 소수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과 2001년 중국의 코트디부아르 공화국에 대한 쌀 수출량은 각각 87.0만 톤과 79.2만 톤으로 총수출량의 각각 29.5%와 49.9%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 1-11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 쿠바, 이라크 등 3국에 대한 쌀 수출은 전체 수출의 68%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쌀 수출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수출다원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일본, 한국 등 지역으로 고품질 쌀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동북지역 쌀의 수출 잠재력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 쌀, 유기농 쌀을 적극 발전시켜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프리카, 남미 등 지역으로의 중단립종 쌀 수출 확대를 꾀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아프리카로의 쌀 수출은 전체 쌀 수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쿠바와 이라크 역시 줄곧 중국의 주요 쌀 수출국이다. 셋째, 동남아국가에 대한 수출 확대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역시 중국의 쌀 수출국이며, 이들

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수출 쌀의 품종 면에서는 첫째, 우수 품질의 장립 고품질 쌀의 수출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타이 쌀과 견줄 만한 우수 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개발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중국 특색미(특색米)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운남, 귀주, 복건 등 지역의 자미, 흑미, 홍미 등이 특색미에 해당한다. 셋째, 쌀 정밀가공상품의 수출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영양이 함유된 쌀, 영양 패스트푸드 쌀 및 쌀 전분류, 미강(米糠) 종합이용 부문에서의 개발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하여 수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교잡종 벼 종자의 수출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식량 유통체제를 개혁하고 쌀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8개 성/시의 식량시장 개방에 이어 기타 지역의 식량시장도 개방하여 쌀의 시장가격 형성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으로 하여금 우수 품질, 우수가격을 형성하고 주문생산의 편의를 통해 규모화 생산과 산업화 경영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국내 대형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가진 브랜드와 기업을 형성하여 국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정정길, 성명환 2003, 36-42).

2.2.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농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고려한 협상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중국이 농업에 관한 한 생산대국인 동시에 소비대국인 점을 감안하여 농산물 무역정책에는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WTO 협상에서도 농산물 수입과 수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수출국 입장과 수입국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모순된 논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DDA협상과정을 평가하면서 개도국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EU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과 EU는 불공정한 보조금이 너무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은 이러한 불공정한 현상을 타개하고 보다 공평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2004년 쌀 재협상을 풀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한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농업재편방향을 결정하면서 ① 경제작물(과채류, 축산, 양잠 등) 중심의 수출형 농업과 ② 곡물류 중심의 수입의존 농업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곡물류 중에서 쌀만은 수출형 농산물로 분류하여 동북 3성 중심의 경쟁력 있는 농업 생산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쌀 재협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농업부 등 관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고 보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그러나 학계 등 농업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 문제는 중국 측이 계속 주장한 바 있듯이

- ①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
- ② 한국 농민은 중국 농민보다 훨씬 소득이 높다는 점
- ③ 그리고 쌀은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수출지향의 곡물이라는 점 등을 들어 쌀 시장의 공평성, 세계화 룰에의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MMA물량의 8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만약 한국이 MMA를 배로 증량하면서 관세화 유예를 결정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더없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아주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학자들은 한국이 MMA를 현재의 배로 증량한다고 해도 300천 톤 밖에 되지 않는 물량이고 중국의 쌀 수출 시장(연간 약 300만 톤)에 금액상으로 큰 혜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WTO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예를 들어 일본도 관세화 유예방침을 철회한 바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2004년 한국의 쌀 재협상에 대한 중국학계 등의 입장은 WTO정신에 입각한 공평한 룰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MMA증량 등의 방식은 결국 중국의 쌀 시장에는 미미한 영향밖에 없어 실익은 없으며, WTO 룰을 지키고 개방 폭을 높여야 한다는 중국의 일관된 주장에 반하는 예외만 인정해 준다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쌀 재협상과 관련한 대중국 접촉은 일반 학계나 연구소 계

층의 영향력 있는 주변 그룹을 지속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쌀 수출 지역인 동북 3성에 대한 더욱 많은 이해와 설득을 얻어내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중국의 FTA 전개 과정 및 전망

1. 중국 · 아세안 FTA

1.1. 중국 · 아세안 FTA 설립 제안 배경

2000년 11월 아세안+3 회의에서 아세안국가들이 중국의 WTO 가입이 아세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주룽지 전총리는 중국 ·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 관련 연구 추진을 제안하였다. 아세안 각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해외직접투자가 중국으로 몰리게 되고 아세안으로의 유입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아세안이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주룽지 전총리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연구제안은 중국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의 사전 의견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당시 주룽지 전총리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동남아에도 유리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중국 ·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검토하자고 제안하였다. 중국 측 제안은 중국의 WTO 가입이 양측의 장기적인 발전에 유리하며 중국 · 아세안 간의 자유무역지대 추진은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협력의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주룽지 전총리의 후속조치로 중국과 아세안 양측 정부부처 관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 중국의 WTO 가입 영향과 중국 ·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2001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 시 전문가그룹의 연구 결과가 아세안과 중국 정상에게 보고되어 양측이 10년 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정식 합의하였다. 상기 전문가그룹

은 지난 1년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측면에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주요 내용은 첫째,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을 가져올 것이며, 둘째, 아세안의 FDI 감소는 중국으로의 유입 증가 때문이 아니고 아세안의 정치불안 등 자체 환경악화 때문이며, 셋째, 중국의 발전은 아세안에 계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이다. 중국은 아세안으로부터 수출품의 핵심부품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아세안과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경합도가 낮기 때문에 무역 및 투자 등의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그룹은 아세안과 중국간 FTA의 형태는 EU나 북미 등의 경우를 참고로 하되, 아시아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것을 건의하였다. 예컨대 보호상품을 별도로 언급하여 점진적 개방을 추진하고 아세안의 신규회원국들을 배려하여 과도기간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중국과 아세안간 FTA의 발족시기를 10년 뒤로 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첫째, 아세안내 자유무역지대가 현재 진전 상황으로 미루어 2010년에나 완성될 수 있으며, 중국도 WTO 가입 후 5년간의 과도기를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 최소 5년간은 중국과 아세안간 무역관계를 재조정할 기간이 필요하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의 전반적 협력과도 관련이 있는바, APEC 역내 무역자유화는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비전그룹이 제안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건설 목표시기도 향후 15년 이내이다. 따라서 10년 내에 중국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가 실현되면 전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장원령 2001).

1.2. 중국 · 아세안 FTA의 기대효과

중국은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중국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지대 설립 가능성을 제기한 후 2002년 11월 “중국 · 아세안 경제협력협약”에 조인하면서 지역경제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양측간 FTA는 전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속화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하면서 전체 아시아지역으로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10년 내 중국과 아세안간 자유무역지대 설립은 2020년을 목표로 하는 APEC 역내 무역자유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

며, 전체 동아시아지역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FTA 창설은 무엇보다도 거대시장의 탄생을 의미한다. 양측간 FTA는 18억의 소비자, 2조 달러의 GDP, 1.2조 달러의 무역규모의 단일시장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동아시아 지역의 일체화 속도를 높이고 아세안 신규회원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양측 FTA 설립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 서남부지역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세안으로 수출되는 화물의 절반 정도가 이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미 유럽 및 싱가포르 업체가 중국 서남부지역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덴마크 Maersk社, 싱가포르 PSA社 등은 이미 광서자치구 항구 건설에 지분참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서해개발전략에 따라 향후 매년 4,000만 톤의 화물이 광서지역의 항구를 통해 수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중국·홍콩간 CEPA 협정

2.1. 중국·홍콩간 CEPA 체결 배경

중국과 홍콩은 2003년 6월 29일 “경제무역 관계 긴밀화 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이하 CEPA)”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것으로 양 지역 간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본 협정은 2004년 1월 발효되며 2006년부터 모든 교역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양 지역은 할당 관세, 반덤핑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세이프가드만 발동할 수 있다.

본 협정의 목적은 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WTO 양허안에 의해 수년 내 금융시장을 포함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서비스 산업에 우위를 가지고 있는 홍콩에게 우선 시장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다. 둘째, ‘일국양제(一國兩制)’에 입각한 통일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홍콩 반환 후 홍콩경제에 디플레이션

이 발생하고 있어 ‘일국양제’에 입각한 중국의 통일 전략이 차질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본 협정을 통해 홍콩경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셋째, 중국·홍콩간 CEPA는 대중화경제권 형성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 반환 이후 이들 지역 간 경제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광둥과 홍콩, 복건과 대만의 경제통합 현상이 심화되면서 화남경제권의 부상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가 각각 독립된 경제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자본과 노동 등의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홍콩, 마카오와의 CEPA 체결을 통해 우선 이 지역과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여기에 2010년 FTA가 예정되어 있는 아세안과 대만지역을 포괄하는 대중화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2.2. 중국·홍콩간 CEPA의 주요 내용

본 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바, 향후 한국은 중국진출 시 홍콩을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중국·홍콩간 CEPA의 주요 내용

	수입관세면제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 및 투자 촉진 협력
주요 내용	- 홍콩산 273개 품목에 대해 1차로 2004년 1월부터 수입관세를 면제함. -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하여 2006년 1월부터 홍콩산 전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적용.	- 2004년 1월부터 경영 컨설팅, 컨벤션, 광고, 회계,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물류, 운송, 화물중개, 보관 및 창고, 관광, 영상 및 음반, 법률, 은행, 증권, 보험 등 17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홍콩기업의 중국 내 회사설립과 영업활동 허용	- 중국과 홍콩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관, 검역, 중소기업 간 협력, 의약, 전자상거래, 무역과 투자 촉진, 법과 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 7개 방면의 협력 확대

표 1. 계속

	수입관세면제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 및 투자 촉진 협력
기타 내용 및 향후 과제	- 중국과 홍콩 양측은 상대의 상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또는 기타 보호 수단의 적용을 배제 - 중국은 홍콩제품에 대해 관세쿼터제 비적용 - ‘홍콩 원산지’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합의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음.	- ‘홍콩기업’의 정의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합의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음.	-
WTO 협약상의 중국 시장 개방 내용	- 2005년까지 평균 수입 관세율 10%로 인하	- 2006년까지 대부분의 서비스업 개방	-

3. 한·중·일 FTA

3.1. 한·중·일 FTA의 전개과정

한국과 중국, 일본은 2002년 11월 자유무역지대(FTA) 설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지대 논의는 궁극적으로 아세안 10개국과 공동으로 FTA를 형성하는(10+3)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FTA 설립을 통해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편 2003년 아세안+3 공동제안에서 후진타오 중국주석은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를 제안하였다.

아세안과 한·중·일이 결합된 FTA 설립을 위해서는 중심축이 될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경제무역에 관한 협의가 관건인데, 이들 국가 간에 무역과

투자 관련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FTA 추진 시 한국과 일본에게 가장 민감한 부문인 농업문제에 대해 중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예, 청화대 후안강 교수, 중국국제경무연구원 서장문 교수 등).

3.2. 한·중·일 FTA 기대효과 및 과제

한·중·일 3국은 총인구 15억 명, GDP 규모는 일본이 세계 2위, 중국이 6위, 한국이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3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 전 세계 서비스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4%에 달하며,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수출에서 유럽과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 36%, 46%에 달하는 반면, 이들 3국간의 역내무역 비중은 2001년 21%에 그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중·일 FTA 설립은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3국간의 무역장벽이 사라지면서 지역 내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이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FTA 설립은 3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경제구조조정 비용을 상호 보완관계를 통해 줄여 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셋째, 3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한국의 통일문제, 중·일 영토분쟁 등과 같은 지역 안보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다. 넷째, 3국간 경제연합의 구축은 다변화된 무역체제 속에서 유럽이나 북미 등의 그 밖의 무역블록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담보할 수 있다.

FTA 설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3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의기구와 제도를 창설하고, 무역자유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하여 모든 국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4. 소결: 중국·아세안 FTA에 전력투구, 한·중·일 FTA는 초기단계

한·중·일 FTA와 한·일 및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아직 확고하게 정해진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중국 정부는 한·중·일 FTA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FTA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단계라고 보인다.

FTA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성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ASEAN시장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 구축에 모든 정책 방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중·일 FTA는 초보단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중국 농업부 산하 농업경제연구소는 한중일 FTA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한 적은 없으며, 금년 11월에 농업부 주재로 미팅이 있을 예정이다. 이는 곧 한·중·일 FTA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아직은 어느 연구기관도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없으며, 연구를 의뢰 받은 바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금년 말 한·중·일 FTA에 대하여 농업경제연구소에 농업 부문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의뢰할 것이라는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보아 학계간의 교류가 중요해지리라고 본다.

그러나 중국은 FTA를 체결할 경우 농업 이외 분야는 한국과 일본에게 득이 되므로 농업 부문이 중국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실제 FTA 체결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 록

■ 일 시: 2003. 10. 14

장 소: 농림부

참석자: Zhang, Liu

- 칸쿤 협상 결렬의 원인은
 - 1) 세계 경제 환경이 8차 협상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했으며 개발도상국의 결합이 미흡.
 - 2) 미국과 EU에서 협상의 틀을 잡았으며 개발도상국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았다.
- 협상은 진행되고 공평하고 공정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협상국의 최신동향,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다.
- 중국은 WTO 가입한 기간이 짧으며 현재는 과도기이며 시급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중국도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 중국은 기본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양보할 것은 다했다. SP 혜택도 받지 못했다. 천천히 실행할 시간이 없다.
- 한국은 농업에 관해서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으나 타 산업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앞서 있다. 농업 환경이 중국보다 매우 좋으며 특히 농기구등이 매우 좋다고 안다.
- WTO 협상은 내년 3월에 재개 될 수 있으며 미국, EU 담당자의 임기가 2년이 남아 있다. 중국은 관망자세이며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중국 정부도 한 중 일에 대한 FTA 연구에 착수했으며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 UR 이후 지역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느꼈고 아세안(ASEAN) 쪽에 경제가 활발해 지역경제는 매우 중요하다.
- 일본과의 자유무역은 접촉은 없으나 계획은 있다.
- 한국과의 농산물 무역흑자는 50억 달러, 전체적 무역적자는 130억 달러임.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
- 한국의 WTO 가입 시기가 중국보다 오래되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 중국의 5대 개혁 부문.
 - 1) 인민공사해체
 - 2) 유통 부문 시장기능으로 조정
 - 3) 다양한 소유제
 - 4) 향진기업 발전
 - 5) 정부 농민 지원 보조
- 3단계
 - 1) 1978-84: 인민공사해체 및 가정단위 경영
 - 2) 1985-91: 농업개혁의 심화. 양곡 구매 공급 통일제도 변화, 시장구조의 다양화
 - 3) 1992: 농업 사회화 체계, 농산물 유통시스템, 농업에 대한 국가 보조 시스템
- 생산력은 향상됐으나 문제점이 존재함.
 - 1) 농촌 세비 개혁: 농업 특산세 폐지, 농민 부담 감소, 향 단위 정부기구 축소로 부담
 - 2) 유통개혁: 시장화 강화. 보조미흡
 - 3) 토지임대책임제도 개혁: 임대기간(15~30년) 연장. 노동력의 도시 진입 후 유흥지 재분배. 경작면적 축소.
 - 4) 농촌신용사 개혁: 소득관세 명확화. 통제 기능 미흡. 소득 증가 둔화 추세

농업경제연구원

농업 경제 연구원은 국무원 산하에 있는 농업 경제 연구원이었음.

90년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업부 산하가 되었음. 업무는

- 1) 위탁연구
- 2) 중국의 31개성의 정기적인 지역조사
- 3) 농업과 농촌 정책 연구 등임.

과거에는 체제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현재는 WTO, 유통문제, 노동력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음.

WTO 협상 전에 농업 분야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중국에서 제출한 조항을 보면 완전 승낙을 한 상황임. 수출보조 Yellow Box 없음. 관세 쌀 1%, 10% 정도 관세. 2002년도 상황을 보면 농산물 가격 상승 덕분에 예상보다 충격이 적다.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특별대우가 필요하다.

중국은 WTO 협상 시 농산물 수입과 수출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수출국 입장과 수입국 입장을 고려할 때 모순된 논리가 많다. 농산물 종류가 많아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협상 타결이 안되더라도 중국에는 큰 영향이 없다. GDP 대비 농산품의 수출비율은 미비하다. TRQ가 생산량의 3% 내외.

현재까지의 협상 과정을 보면 개도국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미국과 EU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불공정한 보조금이 너무 많다. 설탕은 광서, 운남의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중국은 보조할 자금이 없다. 유럽의 생산원가 400달러, 국제가 200달러, 미국은 옥수수 보조금 많음. 미국의 국내 보조금 처리 못한 것이 결렬의 원인.

DDA 협상 성과 평가함. 협상조기 타결 기대.

Green Box는 찬성. Yellow Box는 반대.

한국의 MMA 확대는 중국에 금액상 큰 혜택은 없다. WTO 정신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MMA는 철회.

한중일 FTA 는 관심이 많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연구는 못했다. 2003년 11월 08일 일본 농업부 주체로 한국, 중국, 일본, 유럽과 미팅이 있다.

■ 일 시: 2003. 10. 13. 2:00 PM

장 소: 베이징 농업 대학

참석자: - 안종운 차관, 홍 노무관, 최 통역, 송준호, 박은철

- 이영옥(대학원생) 외 4명 교수

- 순천대 자매결연 대학.
- 베이징농업대학은 교수 300명, 학생 2만 명(대학원생 3000명). 12개과.
- 중국은 인구의 60% 가 농업에 종사. 한국은 인구의 6%. 중국의 경우 농지, 인프라, 용수 등 의 자원이 결핍. 농업인구는 하락 추세. 농업 종사자의 수

입이 매우 낮음. 농민의 수입 증가는 중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이슈.

- WTO 협상에 관해 경제관리학원에서 연구하여 농업부 관리대상으로 강의. 농업정책 주임이 베이징농업대학 교수 출신임.
- WTO 가입은 중국의 기회인 동시에 도전. 가격과 질적 측면에서 항상 부문 산재. 콩 수입 증가. 질을 높여 높은 가격을 받으면 농가 수입 증가 가능. 농약 잔류가 큰 문제. 농산물의 영양, 농약, 중금속 검사 신경 많이 쓰고 있음. (교장 선생님이 관여하고 있음)
- 가격, 품질 경쟁력 갖추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함. 중국은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를 원하나 전체 경제 상황 (전체 품목 고려)을 고려해 많은 부문을 양보. 개방 후 수입보다 수출이 많음. 가격과 질을 향상시켜야 함. 일부 보호망 남겨둠. 중·한 10/1, 10/2 무역 박람회 열었음.
- 중국은 10년 동안 WTO 협상과 준비를 해 왔음. 민족사업(소규모 농가)에 타격이 있으나 WTO 가입은 이점이 많다고 생각함.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10년간 협상진행. 중국은 농산물 포함하여 많은 양보를 했음. 관세, 재분배 등의 정책을 다시 만들었음. TSG 받지 못했음. 90 연대 농산물 결핍에서, 평영, 지금은 농산물이 남는 상황임. 1990년대 말 농가의 수입이 많이 하락함. 중국은 점진적 개방을 선호. 중국 정부는 보호정책 실패. 수출 부문에서 정부의 지원을 기대. 수출을 통해 농민의 수입증대 기대. 완전시장 개방은 사회불안 요소. 양허이행/농민보호 양면적 고민. 미국대비 한국/일본 개방 속도 낮음. 사유화 비율이 매우 높음. 따라서 공평경쟁 희망.
- 중국은 생산대국인 동시에 소비 대국. 농산물 무역 정책 매우 복잡. WTO 가입시 많은 양보. 관세율이 40%에서 15%로 감소. 선진국과 관세율 거의 비슷함. 무역환경에서 공평한 경쟁환경 기대. 자유화 비율이 높은 환경을 바람. 공동으로 시장을 개방하여야 공평한 환경이 조성됨.
- 중국은 농업인구 감소정책을 생각하고 있음. 남아도는 농업인구 약2억. 중국의 3방 정책은 농업과학기술 연구, 질 향상, 농가의 수입 증대임.
- 각 지역에 소도시 개발 농민이동. 2010년까지 농업인구 5억으로 줄일 목표. 인구 감소에 의한 소득 증가 기대. 무공해 농산물 개발 등을 통해 수출 증대. 생태보존/소도시 관리계획이 필요함.

- 농산물이 남아도는 상황. 수출을 해야 함. WTO 가입 후 수출 증가 기대. 구조조정 필요. 양식경작물을 줄이고 경제 경작물을 늘려야 함. 일반 품종을 줄이고 우량품종을 늘려야 함. 축목업 발전을 도모. 소도시 발전시 농산물 가격 증가 기대. 생산, 가공, 유통, 무역에 대한 정책이 나와 있음.
- 과학기술원 지구건설. 공장형 농업 농업선도 역할.
- 중국 ASEAN과 자유무역 성립. 800여 종 개방. 농업과 공업 전체고려하면 상호이익. FTA 일본 학자들과 토론. 일본은 소극적. 한국 리드 희망.
- 동북아를 묶을 필요가 있음. WTO 밑에 소규모 그룹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교류는 많음. 일본에서 농업은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일본은 싱가포르와 같은 농산물 수출이 없는 국가와 FTA 가 가능할 것 같다.
- 9월 하순에 미국학자들과 의견 교류. 미국은 WTO 타결에 관심이 별로 없는 듯함. 그러나 협상 타결은 장기적인 추세.
- 한국과 일본의 농가는 매우 작음. 중국 농가와 비교 수입이 매우 높음. 중국 1인당 연간 수입 250달러. 한국 농민 보조금 1인당 1만 달러. 중국 정부는 농민의 수입 증가에 힘을 기울여야 함.
- 한국은 중국보다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많음. 동북아 FTA 는 중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정보 교류는 가격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가격 변동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남방은 사료를 수입해야 하며 동북은 한국에 수출을 해야 함. 동북지역은 자연 재해가 큼. 가격 안정이 어려움. 축산물 수출이 더 매력적임. 토지가 넓어서 한국보다 유리. 위생검역이 문제임.
- 중국은 많은 것을 양보했으며 WTO 협상의 기본 입장은 변화지 않음.

■ 일 시: 2003. 10. 14

장 소: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인들은 중국의 동북 지방 (삼강지방 포함)에 대해 관심이 많다. 동북지방이 쌀의 주요산지이며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개방 이후 토지

의 사용권은 가정단위로 바뀌었으며 20년간 토지제도 운영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농장 (신강, 동북, 해남)도 있고 개인운영 농장도 있다. 가정단위(개인)의 농장이 효율성이 높다. 토지분산화, 비농업용도 사용 등으로 인해 농민이 손해 보고 있음.

WTO 협상관계는 농업부에서 전담한다. 농업부 내에 WTO팀이 있다. 우리는 학술적 의미에 포커스.

중국은 넓기 때문에 국내 생산원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 99년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세 상품이 우세산지 지역으로 모이도록 하고 있다. 물론 WTO 수요를 고려해서 했다. 중국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좋은 일이며 지역 격차 해소 (서부지역의 농민 수입 증대 방향).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높이 평가. 중국은 농민 지원 낮음. 낮은 소득이 큰 문제.

■ 일 시: 2003. 10. 15

장 소: 인민대학

지난해 농업은 흑자. 57억 달러.

WTO 가입 후 수입 증가 걱정을 많이 했으나 초기에는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금년 6월 이후 작년 대비 74% 증가. 콩 수입이 200% 증가. 유채 170% 증가. 돼지 44%. 농가규모 작음. 특작물, 축산물 국제가격대비 낮음. 문제는 위생 부문. 수출이 안 됨.

소규모 농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재원이 없다. 현추세 지속되면 순수입국으로 전환. 콩 수입 금년 1500만 톤 증가.

구매력 대도시엔 집중. 소비가 패스트푸드에 치우친다. 식품안전, 영양,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다. 전체적으로는 육류소비 증가, 도시에서는 채소 증가. 유제품이 가장 많이 증가함. 사료 공급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 수입이 증가할 것 이다. 현재 옥수수는 수출을 1,100만 톤을 하고 있다. 수입이 많이 된 것이 젓소이다. 호주산 소 2만 마리, 그러나 5만 마리 수입 희망. 사료 부문

수입량 예측 곤란, 정부는 5% 내외, 학자는 15% 내외가 정상이라고 봄. 청예
목초 확대.(증가세 10%) - 일본 수출

농민들에게 돈을 벌려면 사료를 많이 심도록 권장하고 있다.

중국은 인건비가 싸서 기계화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동부지역 농기
구 사용 추세. 국가에서 어떤 품종, 생물기술, 재배기술, 가공기술에 대해 국
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농촌의 과잉노동력의 취업문제가 크다. 1~2.5억 과잉노동력.

농가소득증가는 시급하며 해결하기도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보조 방식의
문제보다는 돈이 없다. 알곡재배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불하나 아주
미흡하다.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 장기적 해결책(solution)은 안 된다.
농민인구가 많아서 적은 타 산업 인구가 많은 농민을 보상하기는 힘들다.

7차 5개년 계획에 대한 큰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식품 안전에 대한 용역프
로젝트는 있다.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2003 중국경제연감-개혁개방의 현 단계-」. 연구보고.
- 유희문 등. 2000. “비국유기업의 발전과 역할”.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 정정길, 성명환. 2003. 「중국 쌀 수급의 현황과 전망」. 연구 보고.
- 강정일, 김정호, 정정길. 2001. 「한중일 농업발전 전망과 협력 방안」. 연구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김정호, 강정일. 2000. 「중국 농업과 농정의 전개 과정」. 연구자료.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박장재. 2003. “광둥의 화교경제와 중국-홍콩간 CEPA 체결의 영향.” 『중국학연구』 제26집. 중국학연구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중국농업연구자료집(4) 농업·농촌정책 개혁과 20년간 회고」. 연구자료.
- _____. 2002a. 「중국의 사회·경제 구조와 농업정책」. 연구자료.
- _____. 2002b. 「중국의 농산물 수급과 생산구조」. 연구자료.
- _____. 2002c.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제2회 한중 국제공동학술대회 논문집. 연구자료.
- _____. 2002d. 「중국농업의 국제화와 발전과제」. 연구자료.
- _____. 2003. “중국 농업개혁의 과정, 성과, 문제 및 시사점.” 『북한의 농업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국제워크숍 자료집.
- _____. 2004. 「농업전망2004, 시장개방: 도전과 기회」. 연구자료.
- _____.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2003. 「동북아시아 지역의 농업협력 필요성과 가능성」. 동북아 농정연구포럼 창립기념 및 제1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결과보고서.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2002年-2003年: 中國農村經濟形勢分析与預測」.
- 中華人民共和國農業部. 2003. 「中國農業」.
- 中國國家統計局. 各年版. 「中國統計年鑑」.
- 장원링. 2001. “중국·아세안 FTA 창설 합의 배경과 의미.” KIEP.

연구자료 D186

중국의 WTO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4. 3.

발 행 2004. 3.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 www.krei.re.kr](http://www.krei.re.kr)

인쇄처 (주) 문원사 02-739-3911~5

- 이 자료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